

# 탈서구중심주의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의 모색 : 강정인의 ‘상사성’ 비유와 ‘개념적 중립성’\*

이관후 | 서강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은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에서 강정인이 제시한 ‘상사성’의 비유를 ‘개념적 중립성’으로 재이론화 하려는 시도다. 강정인은 달마이어가 제시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라는 방법론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문명간 대화에서 공간 뿐 아니라 시간적 영역의 확장, 비교 및 매개 개념의 맥락성과 설명력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강정인은 탈서구중심주의의 4가지 전략 중 역전 및 하이브리드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생물학의 ‘상사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발생학적 동질성’이 아니라 ‘기능적 유사성’을 대화와 비교의 매개로 삼는 것이며, 이 글은 이러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춘 사례로 ‘정당성’과 ‘대표’ 개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탈서구중심주의, 비교정치이론, 교차문화적 대화, 횡단성, 상사성, 개념적 중립성

\* 이 제목은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이 제안해 준 것이다. 심사 후 수정과정에서 세분 심사위원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 I. 문제 제기: 비교정치이론의 방법론적 난제

근대 사회과학에서 비교정치연구(comparative political studies)는 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비교정치학’은 고대로부터 연원을 따지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근대에서는 마키아벨리나 몽테스키외 등의 저작에서 그 전통을 찾아야 하겠지만, 보다 가깝게는 19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진 각 나라의 헌법과 정치제도에 대한 비교, 20세기에 등장한 행태주의와 근대화 이론, 포스트 행태주의 연구 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글로벌 시대의 출현과 함께 비교문화 연구, 서발턴 연구, 비교종교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교 연구가 정치학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비교정치이론(comparative political theory)’, 혹은 ‘비교정치철학’ comparative political philosophy)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연구 분야(이하 CPT)가 등장했다.<sup>1)</sup>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CPT에서는 특히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질문이 제기되면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March 2009, 531; Williams and Warren 2014, 48). 또한 1990년대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경제발전이 두드러진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유교와 서양 정치사상을 비교하는 것은 아시아권 CPT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CPT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외부적 변수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세기 후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최근의 정체, 냉전 이후 21세기에 들어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 같은 요소들이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유교 민주주의 담론, 중국식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론적 탐구들의 부침은 CPT가 경기변동이나 국제정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학문 내적 변수로, CPT의 연구방

---

1) 비교정치이론(comparative political theory)은 제도와 문화, 철학과 사상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그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다소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칭하여 ‘CPT’로 약칭하고자 한다.

법과 관련된 문제다. CPT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실령 그것이 과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많은 경우 현재의 정치와 경제, 문화적 우위성 등과 관련된 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CPT 연구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은 방법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국가나 이념, 문명의 차원에서 권력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CPT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내부적 요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아시아적 가치 논쟁(Asian value debate)’에서도 잘 드러났다. 당시 논쟁에 참여한 주체들은 동서양과 문명적·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적·문화적 가치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는데, 사실 이러한 입장은 각 주체들의 정치적 목표 및 전략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헌팅턴, 리관유, 김대중이 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미국·싱가포르·한국에서 각 주체들이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1993년 사무엘 헌팅턴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와 국제적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유교 문화권의 문명적 특성으로 인해 서구 문명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제적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 후인 1994년,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는 동일한 저널에 「문화는 운명(Culture is Destiny)」을 실어 헌팅턴의 견해를 비판했다. 리관유 이외에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다른 아시아 정치 지도자들 역시 문화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제도와 정치적 이념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정당하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아시아 문화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 사회에서 여러 부정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Park and Shin 2006. 341).

그러자 김대중은 같은 해에 동일한 저널에 실린 「문화는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에서 이를 재반박했다. 리관유의 주장에 대해 그는, 민주주의가 아시아 국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시아 문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수많은 자발적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김대중은 ‘로크 이전(Long before Locke)’이라는 장에서 맹자(孟子)의 역성혁명론을 예로 들며, 민주주의와 유교 정치이론의 친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동학운동 또한 그러한 정치적 전통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라고 불린 이 사건에서,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아시아적 가치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반면, 아시아에서 서구식 민주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학자와 정치지도자들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90년대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진행된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났지만, 지금도 유교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중국의 학자들과, 유교와 서구민주주의의 접목 가능성을 탐구하는 홍콩과 대만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전략적 긴장이 학문적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정치사상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이러한 경향성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향성은 CPT의 목적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탈서구중심주의를 통해서 서양에 정도·종속되어 있는 학문적 장과 사고의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동양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시도가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양의 시공간적 경계를 넘나들고 허름으로써 정치학 연구에서 보편적 지평을 열고자 하는 목적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연구의 목적에 따른 방법론적 차이가 화해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을 때, 이것이 정치경제적 변수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정인의 제안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CPT 연구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탈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방법론과 그에 대한 강정인의 평가 등을 살펴보고, 강정인의 미완성 연구에서 제시된 ‘상사성’ 개념을 분석한 뒤, 그 적용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 II. ‘횡단성·교차 문화적 대화’ 개념의 방법론적 진화와 한계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CPT만이 정치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실 대부분의 정치이론이나 사상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다. 다만 그러한 주장이 순전히 정략적·이데올로기적 공방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학문적 논쟁의 필요성과 가치, 일정한 객관성·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CPT에서 그러한 방법론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달마이어(Dallmayr)가 제시한 ‘횡단성(transversality)’과 ‘교차 문화적 대화(cross-cultural dialogue)’ 개념이다. 횡단성은 교차 문화적 대화에서 ‘중심’으로서의 서구라는 매개가 없어도 서로 다른 문화적 영역 사이에서 경험과 가치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인식을 의미하며, 교차 문화적 대화는 각 문화적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에 대한 상호적 대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구의 예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 ‘낮선 것으로의 선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Dallmayr 2004, 252-4).<sup>2)</sup>

한국에서 CPT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강정인 역시 이 개념들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특히 가타리와 정화열 등이 횡단성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화열은 횡단성이 ‘보편으로서의 진리의 투명성 가정에도

2) 간디의 비폭력주의처럼 정치 윤리의 차원에서 비서구의 방법론이 종종 서구의 것들보다 지역적·보편적으로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전하며 서구 근대성에서 진리에 대한 유럽중심적 준칙에 내재한 보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말한다(Jung 2009, 218). 횡단성은 단일한 보편적 정치사상을 부인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변화를 추구하며, 다원성과 소통, 매개를 지향한다. 이처럼 횡단성 개념의 유용성이 분명한 반면, '어떻게 횡단성에 입각한 비교정치사상(철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론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강정인 2013, 37-39).

강정인은 그래서 횡단성의 적용가능한 방법론이 교차문화적 대화이며, 그것이 적절히 활용된 사례로 파레크의 '상호작용적 다문화주의(interactive multiculturalism)'를 제시한다. 파레크는 인도 힌두교의 비폭력 개념을 서구적·기독교적 카리타스와 접목시킨 간디의 사례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 문화 내부의 이질성과 유동성, 상이한 도덕·종교·문화적 전통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정인은 이 속에서 '확장적으로 진화하는 합의'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국제적 차원의 대화를 넘어 '교차시간적 대화'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강정인 2013, 49-53).

마치(March) 역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가 경험적 차원에서 서구중심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서 달마이어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교차문화적 대화에서 더 많은 방법론적 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존의 CPT에서 동·서양의 비교에 대한 과도한 의식이나 집착 자체가 오리엔탈리즘의 징조이며, 이러한 비교에서는 '우리'와 '그들의'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여전히 '비서구에는 서구에 없는 것, 혹은 서구와 다른 것이 있다'는 식의 신비주의나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야 하며, 비서구의 정치사상이 서구 이론과의 비교 없이도 그 자체로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마치는 CPT가 지구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에 그친다면 CPT가 다루는 국제적 범주와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윤리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이론적, 실천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고 주장한다. CPT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이론과 실천을 다루며, 이는 단순히 학문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March 2009, 538-565). 따라서 대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에 머물지 말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해야 한다.

젠코(Jenco) 또한 CPT가 서구와 비서구간의 대화에서 머무른다면 이론적 완결성을 가진 방법론이 되기 어렵다는 데에 동의한다. 젠코는 서구와 비서구라는 공간성을 넘어, 정치사상이 본질적으로 ‘과거와의 항상적인 대화’라는 시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많은 CPT의 방법론에서 서구 정치사상을 탐구할 때는 서구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조망하지만, 비서구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전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공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비판한다(Jenco 2016). 이러한 젠코의 주장은 강정인이 ‘교차시간적 대화’라고 부른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따라 정치사상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시간적 영역을 추가한다면, 비교의 영역은 서구와 비서구라는 공간적 구분을 넘어서 시간을 포함한 ‘2X2 형식’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것이 대다수 CPT 방법론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다.<sup>3)</sup>

서구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화자들, 곧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상사의 다양한 이론과 아이디어들이 모두 CPT 연구에서 동등한 대화의 주체가 되는 반면, 비서구에서는 특정한 몇 개의 사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등한 대화의 주체

3) 한 심사자는 엘 아민의 중요한 연구(El Amine 2016)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CPT 연구자들이 동서양의 이분법을 넘어서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안에 갇혀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니 필자는 엘 아민이 대안적 연구관점으로 제시하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근대성’과 ‘주권자로서 근대 국가의 보편성’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은 동서양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장점을 갖지만, 동시에 ‘차이’를 무화시킴으로써 기존 개념들의 억압성을 가리기도 한다. 엘 아민이 제시하는 대안적 개념이 현정주의, 인권,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에 대한 논의에는 별도의 글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독자들로서는 엘 아민의 현정주의, 민주주의와 이 글의 후반부에서 필자가 제시한 정당성과 대표 개념 중에서 어떤 것들이 CPT에 더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로 인식되지 못한다. CPT에서 전 지구적 대화의 주체로 ‘대상화’ 된 비서구는 근현대의 비서구가 아니라 과거 혹은 그것과 연관된 현재적 유산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CPT에서 ‘민주화’라는 주제로 한국과 서구 사이의 교차 문화적 대화를 시도할 때, 우리는 대체로 서구 민주주의에서 그리스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모두 활용한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전통 사상(주로 유교)과 그 특수성이 현대에 미친 긍정적 기여나 부정적 영향 중 한두 가지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sup>4)</sup> 또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근현대의 다층적인 사상적 변조와 발전상을 면밀히 살펴보기보다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몇 가지 지표나 민주화의 역사에서 특정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예외’나 ‘결핍’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sup>5)</sup> 이런 연구들에서는 현대의 한국인들이 만들어 낸 것을, 서양의 과거와 현재, 동양의 과거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한국의 민주화는 예외적인 것이고, 이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서구의 과거나 현재의 개념과 비교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오류는 CPT 분야의 연구자들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상호 공유되기 어려운 탈맥락적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Korean democracy, Korean style democracy)’라는 용어가 이론적으로 설 자리가 많지 않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순수하게 객관적·학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박정희가 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한 이래로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그러한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이 용어는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특정한 역

4) 유교와 한국 민주주의를 접합시키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5) 비교정치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왜곡’, ‘결핍’, ‘과잉’, ‘불구화’ 등으로 묘사하는 연구들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성을 담보한 독특한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CPT 연구자가 이 용어를 국제적인 학문의 장에서 별도의 개념화 없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용어 사용의 부적절함은 물론, 비교 연구 이전에 한국정치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대해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와 젠코의 지적대로, 공간성을 위주로 한 비교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정작 대화와 횡단의 주체이나 배경이 되는 비서구 사회에 대한 이해와 시간성(역사성)을 무시한 채 압축적 도식화를 추구한 결과다. 과연 특정한 시간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미국(유럽)의 민주주의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부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다른 문화권의 민주주의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가 CPT의 방법론에서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 낸 것은 분명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전히 일정한 한계도 갖고 있다. 대화의 주체와 주제, 그것을 인지하고 구성하는 방식, 그것을 다루는 범주와 이해의 수준이 서구와 비서구간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념과 비교의 기준이 서구에서 결정되고 확립되며, 비서구인은 그 기준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간단한 비유로 말하자면, CPT를 논하는 ‘국제’ 회의에서 참여자들이 영어로 말할 때 화자들은 항상 영어로 된 개념만을 사용하는 것이다.<sup>6)</sup> 이것은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지폐가 미국 달러를 통해서만 교환되는 것과 같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는 달러로 호환이 어려운 통화가 시장에서 기각되듯이, 영어로의 호환 가능성이 적은 개념들은 교차문화적 대화에서조차 쉽게 사장된다. 즉, 비영어권 정치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지라도, 영어적 맥락으로 옮기기 어렵거나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개념들은 교차 문화적 대화에서 인지되지 않거나

6) 우리는 이 ‘국제’ 회의를 ‘영어로 하는 회의’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회의에서 공통되는 언어는 대부분 영어다.

7) 이것은 강정인이 ‘횡단성’과 ‘교차 문화적 대화’를 설명하면서 자주 활용했던 비유다.

무시되기 쉽다.<sup>8)</sup>

반면 영어권에서 발전된 개념들은 보다 쉽게 ‘횡단성’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유교는 항상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질문이 편향된 이유는, CPT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족공동체를 강화하고 인간의 선한 본성에 기여하는가?’를 거의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결국 시간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에서 진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개념과 비교의 기준이 서구에서 결정되고 확립된다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비원초성(non-indigenusness)’이야말로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 대한 CPT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CPT 연구는 여전히 ‘방법론적 전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강정인의 미완성 연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III. 강정인의 전략적 탈출구와 방법론적 상상

강정인은 90년대 이후 오랫동안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CPT를 연구해왔다. 특히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2천 년대에 들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는데 성공했다. 강정인(2004)에 따르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동화(또는 통합) 전략, (2) 역전(또는 반대) 전략, (3) 하이브리드(혼합) 전략, (4) 해체 전략.

8) 물론 CPT가 속해 있는 ‘정치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영역 자체가 근대 서구에서 발전해왔고, 여전히 강한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치적 이상과 가치 대부분이 서구에서 발견되거나 (재)발명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합의한 정치적 가치인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인권 등의 가치가 번역과 수용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화적(통합) 전략은 주변이 중심의 핵심적인 제도와 실천, 가치 및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편성을 획득하고 우월성 공유하는 전략이다. 역전 전략은 중심과 주변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 관행, 가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동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차이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뒤집어서 비정상이나 열등하다고 평가받는 요소를 정상이나 우월성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혼합 전략은 중심과 주변 모두에서 특정한 긍정적 요소를 선택하고 혼합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해체적 전략은 중심과 주변의 분할, 또는 분할을 가능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대립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중심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김대중의 전략과 현재의 홍콩·대만 학자들의 입장은 동화적, 또는 혼합 전략에 가깝고, 리관유나 다니엘 벨, 중국의 주류학자들이 가진 입장은 역전 전략에 가깝다. 그리고 해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략들은 모두 교차문화적 대화의 매개를 필요로 한다. 달리 말하면, 횡단성에서 ‘낯선 것’에 해당하는 실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부딪친 방법론의 장벽이다. 즉,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개념 설정의 중립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정인은 ‘상동기관(homologous organ)’과 ‘상사기관(analogous organ)’이라는 생물학적 은유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강정인 2013).<sup>9)</sup> 근대 생물학은 초기에 주로 상동성, 곧 유사한 기관의 발생학적 기원과 그 변태에 초점을 맞췄다. ‘인간의 손에 (발생학적으로) 해당하는 기관을 고래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인간의 손과 고래의 앞 지느러미는 왜 그렇게 다르게 진화했는가?’와 같은 질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물학의 상동성을 CPT에 관한 질문들에 투영한다면, ‘서구에서 발전된 특정한 정치적 개념(인간의 손)이 비서구

9) 강정인이 이 생물학적 비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강정인 2013, 53-58)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다. 또한 다른 곳에서 이 비유를 이론적으로 더 발전시킨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설명 부분에서 참고문헌에 대한 주석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 스스로 이 비유가 적절한지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후속 연구가 중단되어 안타깝다.

의 다른 개념(고래의 앞지느러미)과 같은 것인가?’, ‘그것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이 CPT 연구에서 인간의 손에 비유될 만한 개념은 ‘민주주의’ 또는 ‘자유’일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초기 CPT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핵심적이었다. 예를 들어, 드 베리(de Barry)의 질문은 ‘유교에 자유와 인권이 존재하는가?’였다(de Barry 1983, 1998).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론은 주로 ‘서구에서 발견된 자유(인권)이 비서구에도 있다(없다)’, 혹은 ‘비서구의 과거에 존재한 자유의 초기 개념(배아 초기의 원형기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서구의 자유(인간의 손)로 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고래의 지느러미)로 변태되었다’는 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질문들은 추후 CPT 연구에서 논란이 될 만한 논쟁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서구(인간)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강정인이 제시한 생물학적 은유의 맥락에서 볼 때, 동화 전략은 확실히 상동성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역전 전략이나 하이브리드 전략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상동성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를테면,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는 손에 비해서 확실히 지느러미가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sup>10)</sup>

생물학의 방법론은 발생 기원의 상동성(homology)에서 발전과정에서 기능을 상사성(analogy)에 대한 연구, 곧 상동기관에서 상사기관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사성에서는 발생계통의 공통성이나 차이점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유전적 기원이 전혀 다른 기관도 환경적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상동성이 ‘발생학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사성은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

10) 물론 지상의 세계와 물속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종종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를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로 이런 사고의 결과가 반드시 전체주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권위주의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처럼 맹목적인 체제 옹호론이나 자민족중심주의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신유가 연구 집단(Neo-Confucian study group)’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조경란(2013)을 참조.

과학계에서 점점 더 많은 생물학자들은 상사성이 상동성보다 진화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즉, 과거에는 상동성에 비중을 두면서, 박쥐는 새와 다르게 오히려 쥐에 가깝다는 점을 과학적 사실로 강조했다면, 이제는 박쥐가 깃털이 달린 날개는 아니지만 얇게 퍼진 피부를 통해서 어쨌든 새처럼 날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는 것이다(강정인 2013). ‘비행’을 하는 데에 반드시 ‘날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박쥐는 발생학적 분류로는 쥐에 가깝지만, 날아다니는 점에서는 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발생학적 기원’과 ‘기능적 유사성’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사성에 초점을 맞춰서 앞서 물었던 CPT의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인간의 앞발(손이 아니라!)과 코끼리의 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앞발과 코끼리의 코는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진화했는가?’와 같은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상동성에 기반을 둔 질문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횡단성을 보여준다.

#### IV. 상사성과 개념적 중립성(conceptual neutrality)

강정인이 제시한 상사성의 비유는 교차 문화적 대화를 할 때 서구 발생 기원의 매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떤 성격의 소통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상상력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 비유를 CPT에서 어떻게 재개념화·재이론화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sup>11)</sup>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강정인의 4가지 전략으로 돌아가 상사성의 문제를 고민해보자.

강정인(2004)이 지적하듯이 동화 전략과 역전 전략은 실천 전략으로서 명쾌해 보이지만, 논리적 단순성만큼 서구나 비서구의 특정 입장에서 우월성을 전제한

11) 이와 관련한 강정인의 후속 연구는 불행한 사고로 인해 진행되기 어렵게 되었다.

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서구중심주의는 헤게모니 경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교차문화적, 상호적 대화는 형식적 제스처에 그치고 만다. 그 대안으로서의 해체 전략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인간들이 세계 시민보다는 특정한 공동체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실재의 세계에서 실현되기 쉽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넘어서면 곤장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이 예정되어 있다는 헨팅턴의 주장을 재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명 간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소할만한 전 인류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대안 세계’의 모델이 분명하지 않다면 해체 전략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에서도 교차 문화적 대화의 주체들이 비교와 소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횡단성의 차원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상사기관’에 해당하는 방법론적 실체에 해당하는 개념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 개념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CPT 이론에서 일부가 제시된 바 있다. 윌리엄스와 워렌에 따르면, CPT에서 방법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시간적으로도 특정한 역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넓은 범위의 과거·현재·미래 시제에 존재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미래의 정치적 상상까지도 구성할 수 있는 유용성이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다(Williams and Warren 2014, 48).

마치는 ‘횡단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CPT를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벽이, 한편으로는 비서구에 대한 편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상대주의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와 ‘설명적 (재)해석(explanatory-(re)interpretative)’을 제시한다. 맥락적 이해란 개념의 발생론적 기원과 본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서 유연하게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고, 설명적 (재)해석은 그러한 개념을 통해

서 기존에 설명되지 못했던 것들이 설명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는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역사적 텍스트를 해석할 때, 비교정치 이론이 가진 방법론의 장점을 CPT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March 2009, 549).

이러한 맥락적 이해를 강정인의 상사성 비유를 통해 재음미해보면, 발생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공통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CPT에서 동서양의 다양한 시·공간에서 공통된 기능적 개념들을 포착해 내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 된다. 이것은 특정한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인류 전체의 정치공동체에서 유용한 개념으로서, 비서구에 대한 편견과 완전한 상대주의 사이에 놓인다. 상사성, 곧 기능에 주목하는 이러한 개념들의 속성은 다양한 시공간에서 중립적이며 보편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CPT에서 수행하는 비교의 기준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으로 ‘개념적 중립성(conceptual neutrality)’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개념적 중립성이란 베버가 ‘가치중립성(Wertfreiheit, value-neutrality)’이라고 부른 것에서 일부는 유비되고 일부는 대조된다.<sup>12)</sup> 베버의 가치중립성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발견된 사실들이라도 도덕적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회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것은 과학적 사실과 달리 보편적일 수 없고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유효하다’는 두 가지 진술의 쌍으로 이루어져있다(Bisztray 1987, 42). 이를 개념적 중립성에 대입해 본다면, ‘동서양의 여러 시공간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발견된 개념들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선형적으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대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개념적 중립성은, CPT에서 대화와 비교의 매개가 되는 개념이 가치, 지리, 역사, 시간적 측면에서 가치중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적 중립은 상호성과 평등성,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며, 문화적 편견과

12) 한 심사위원이 이 글에서 주장하는 개념적 중립성이 베버의 가치중립성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다.

우월성(열등성), 발생학적 원초성 등을 극복한다. 즉, 특정한 지역과 시간대에서 동일한 개념이 존재 혹은 부존재하거나, 우선적으로 출현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대신 사회 혹은 공동체가 발생·유지·존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요소들 간의 유비와 비교가 이루어진다.

이 개념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상사기관을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박쥐와 새의 비유로 돌아가 보자. 박쥐는 발생학적으로 새가 아니며, 박쥐는 새처럼 날지 않는다. 그러나 박쥐도 날고 새도 난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쥐는 포유류, 새는 조류라는 분류가 아니라 둘 다 '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날개(wings)'의 존재라는 기준은 깃털을 가진 새의 존재에 기준을 둔 것이지만, '난다(flying)'는 기능은 중립적이다. 이처럼 '날개'와 '난다'는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등과 같은 보편성을 가진 개념이 '날개'처럼 존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난다'는 개념처럼 실제적으로 구현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능하다.

우리가 박쥐와 새를 구분하면서도 동등한 생명체로 인지하는 한, 이 논쟁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귀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쥐가 새가 아니라는 사실이, 박쥐에 대한 모욕이나 결핍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박쥐가 새처럼 날지 않아도 박쥐의 품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양자의 비교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나는 방법과 날 때 사용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모두 날고 있는 점이다. 이제 '난다'는 행위를 추상화하여 '비행(flight)'으로 개념화 해보자. 이제 이 중립적 개념은 상사성을 통해 동등한 상호적 비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sup>13)</sup>

13) 이러한 상사성의 비유에 대해 한 심사자는 “정치적 개념들은 다양한 문화권을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는데 반하여, 상사기관에서 설명되는 발생학적 차이와 기능적 유사성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에 해당한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주셨다. 예를 들어, 이것은 박쥐가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얽은 막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들의 정치공동체에서는 상호적 영향이 존재하지만 상사기관의 경우 그러한 영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생물학의 진화가 것처럼 ‘용불용설’의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고 돌연변이와 우연을 통해서 ‘적자생존’이 일어났더라도, 그 과정은 또한 ‘긴 점프를 쉽게 해서 새로부터 먹이지 않거나 새와 먹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비행’에 해당하는 중립적인 정치적 개념을 찾는 일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CPT에서 이러한 개념적 중립성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점에 동양과 서양의 여러 문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정치 공동체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을 때 충족된다.

예를 들어, ‘정당성(legitimacy)’ 개념은 근대 서구에서 발견되고 발전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와 달리 가치, 지리, 역사에서 개념적 중립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성은 정치체제나 정부형태, 어떤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모든 지배-피지배 관계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 개념 역시 정부가 존재한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립적 개념이다. 어떤 정치공동체에서도 대표가 없는 통치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동시에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치를 CPT 연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상기관, 곧 중립적 개념의 사례로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V. 개념적 중립성의 사례

### 1. 정당성

통치(government)란 정치공동체에서 치자와 피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이며, 정당성은 치자와 피치자라는 두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

---

경쟁을 한, 혹은 키가 큰 식물을 먹기에 적절하게 목이 긴, 혹은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네발 보행을 포기한’ 것처럼, 의식적이지 않지만 상호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대의 경험을 돌아볼 때, 과연 동서양에서 정치적 개념들이 다양한 문화권을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서구가 제시한 정답을 따라가기에 바빴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키는 필수적인 매개다. 정당성은 통치자가 정치적 힘을 행사할 때 그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부와 맺는 관계에서 발생하며, “정치권력과 복종 사이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개념 (Coicaud 2002, 10)”인 것이다. 그래서 정당성은 권력, 지배, 통치 등과 더불어 정치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본질적인 개념 중 하나다. 정당성은 통치가 존재하는 모든 시공간에서 정부의 존립을 결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근대 서구기원의 개념에 비해 문명적으로 훨씬 넓은 지리적 보편성과 시간적 중립성을 갖는다(이관후 2015).<sup>14)</sup>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권력이나 권위 이외에 정당성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치란 단지 권력투쟁과 동의어가 된다. 또한 지배권력의 물리력만으로는 통치의 존속이 불가능하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한번 자유를 맛본 인간들은 좀처럼 압제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에 대한 복종의 기반은 법률과 같은 제도나 물리적 힘, 또는 권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정치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Barker 1990, 4-5). 어떤 통치도 정당성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정당성은 정치권력의 행사와 그에 대한 동의와 복종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발생·유지시키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거의 모든 통치는 비민주적이었지만, 여기에도 다수의 정당한 통치가 존재했다. 현대에 들어서도 정당성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

14) 강정인은 이상익과 함께 쓴 논문 '동서양 정치사상에 있어서 政治的 正當性의 비교'에서 정당성 개념을 다룬 바가 있다. 이 연구는 동서양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핵심 개념은 모두 동의의 여부와 공동선의 추구이며, 이 두 요소는 긴밀하게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주장한다(이상익·강정인 2004). 물론 여기서 CPT의 다양한 비교 기준 중에서 왜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정치사상을 비교했는지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강정인과 이상익이 서구중심주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동서양 비교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방법론적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중립적 개념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그들이 진행해 온 연구들을 방법론적으로 재발견하고 정립하는 의미도 갖는다.

는 없다. 비민주적이면서도 정당한 통치는 가능하며 실제로 그러한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한 체제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체제에 동의하기 때문이지, 다른 선택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특정 정치공동체에서 충분히 수의 사람들이 비민주적이지만 다른 가치나 이유로 인해서 그 체제가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체제에서는 통치가 작동한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정당한 정치체제로 인정하지 않거나, 민주주의보다 더 정당하다고 여기는 정치체제가 나타난다면, 민주주의는 보편성과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성과 달리 자기완결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중에서 ‘통치’의 유지·존속에서 더 본질적인 개념은 정당성이다.

이러한 정당성의 본질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기는 하나의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권위에 대항하는 새로운 힘이나 권위가 등장하여 생겨난 권력의 공백 상황, 곧 칼 슈미트가 ‘비상 상황’이라고 부르는 순간이다.<sup>15)</sup> 새로운 힘이나 권위가 기존의 권력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통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정당성은 다른 개념들과 달리, 혹은 그것들보다 더 많은 개념적 중립성을 갖는가? 이 개념이 경험적(empirical) 측면과 규범적(normative) 측면에서 모두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먼저 정당성의 근거로 가장 직관적인 것은 경험주의적 증거다. 이것은 어떤 통치 체제를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꺼이 수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정당성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비담은 ‘한 정치 공동체에 정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통치의 규칙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정당성의 경험적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사람들에게 정치권력을 행사할 이유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권력이 정당한 규칙과 동의의 증거들에 따라 획득되고 행사될

15) 이것은 물리적 힘이나 권력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정당하다고 여겨지던 법이나 제도가 전복되려면, 새로운 법과 제도가 더 많은 ‘정당성’을 획득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는 그것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규칙에 따른다는 행위를 통해서만 실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 우리는 그 통치가 정의롭거나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Beetham 1991, 3-11).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의 정치 체제는 그것이 정당하다는 사람들의 믿음 여부에 따라 존속이 가능하다(Schaar 1989, 20; Peter 2009, 56-9; 이관후 2015). 또한 이러한 믿음의 존재가 정당성을 구성한다는 보편적 속성에 더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는 과정이 각 정치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문화상대주의적 특수성도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은 또한 경험주의적 증거를 넘어 규범적(normative) 근거를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인간들은 자신들을 통치하는 권력에 대해 물리적 힘 이외에도 도덕성과 가치지향성을 요구한다. 가령 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인민들로부터 충분히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 결과뿐 아니라 방법에서도 윤리적으로 옳다는 평가를 받을 때다. 또한 유사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규범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회에서는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이관후 2015).

그래서 정당성을 구성하는 규범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문화 상대주의적 특성은 제도, 권위, 법률 체계에서 모두 나타난다. 먼저 레펠드는 ‘시민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특정한 제도를 수용할만한 충분한 이유(good reasons)’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Rehfeld 2005, 16). 주목할 지점은 시민들이 그들에 대한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 ‘이유’를 갖는 것과 규범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갖는 것 간의 구분이다(Bellamy and Weale, 2015). 이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규범적 요소들에서도 공통적 ‘이유’를 넘어서 ‘충분한 이유’들이 다를 수 있고, 각 공동체들마다 개별 규범들이 갖게 되는 충분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권위’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즈는 ‘권위는 거기에 그것을 받아 들일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레펠드와 마찬가지로 정당성의 ‘일반적인 이유’들과 ‘보다 나은, 충분한, 최상의, 결정적인, 타당한, 주요한’ 이유들을 구분한다(Raz 1986, 29-54). 법학자인 하트는 “법을

포함한 실제적 권위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이유’라는 개념이 그러한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Hart 2012, 54-6). 이처럼 정당성을 구성하는 규범적 요소들 역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의미와 조건, 함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민의 의사(people's mind)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정당성 문제의 핵심인, 지배와 복종의 주체라는 개념은 언제나 전복가능하고 또 전복되어 왔다. 통치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복종, 그리고 그 두 행위의 주체가 경험적, 규범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개념들의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공통된 개념(concept)이 있을 뿐, 이 개념들에 대한 해석(conceptions)은 늘 상대적이며, 결국 우리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 관계론적 정의를 통해 그 틀(frame)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내용(contents)을 확정할 수 없다. 이것을 정당성이란 보편적 개념이 갖는 주체와 근거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principle of uncertaint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이관후 2015). 그리고 바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정당성의 개념적 중립성을 가능하게 한다.

요약하자면, 정당성은 동의와 복종을 통해서 통치가 발생·유지되는 모든 곳에서 필연적 개념이면서, 경험적·규범적 차원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 근거들은 정당성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적 규범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주체들이 갖는 관계가 중요하며, 이 관계의 본질은 불확정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인민의 의사가 정당성의 핵심인 이상, 그 개념을 충족시키는 내용은 사전에 규정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당성은 다른 개념들에 비교해서 과거와 현재, 동서양이라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개념적 중립성의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2. 대표

민주주의는 현재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유일한 게임’으로 인정받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러나 CPT의 관점, 특히 상동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었다가 근대 서구에서 다시 재발견 혹은 새롭게 창안된 사상이자 제도다. 따라서 역사적·지리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를 설명할 때, ‘자유’나 ‘사회’와 같은 수식어보다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대표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일 것이다.<sup>16)</sup> 그래서 현대의 정치체제는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결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민주주의’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대표’를 중립적 개념의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개념을 가치, 지리, 역사의 중립성 측면에서 검토하되, 대표 개념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표(제)’를 통한 정치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역사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두 가지는 각각 유럽과 미국의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 관점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표’ 역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16) ‘대의민주주의’는 ‘representative democracy’의 번역 용어로 ‘대표제(representation)’와 ‘민주주의(democracy)’의 결합이다. 그런데 그 번역어로는 ‘대표제 민주주의’나 ‘대표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나아가 ‘대표제’를 ‘대의제’로 쓰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대표(代表)’라는 용어는 대표자의 역할에 대해 순전한 대리에서 완전한 자율 사이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대의(代議)’는 대표제나 대표자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의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용어의 번역 기원은 19세기 후반 일본이다. 1875년 전후에 등장한 일본 번역어 ‘대의’는 1884년 <한성순보>를 통해 한국에 수입되었다. ‘대의’라는 개념에서는 대표되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대표자들이 의논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맥락이 강하다. 이 논의에 참여하는 대표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다. ‘representative democracy’가 ‘대의민주주의’로 번역될 때에는 이러한 함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이관후 2016a).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표제의 본래적인 개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대표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추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에서 ‘대표’가 시공간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상상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먼저 앞의 두 입장을 살펴보자.

현대 대표(제) 연구의 선구자인 한나 피트킨(Pitkin, 1967)에 따르면 대표제 정치체제는 근대 유럽에서 기원한다. 피트킨은 현재 통용되는 정치적 대표의 개념과 체계는 13~17세기 사이에 중세 유럽에서 대부분 탄생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종교적 권위인 교황권이 현대 정치의 대표제의 기원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황이 '기독교 신자(들)' 또는 '기독교 공동체'인 '에클레시아(Ecclesia)'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수백 년에 걸쳐 정립되었다. 교황들은 이 '종교적 대표' 개념을 곧바로 모든 인류의 세속 사회에 대한 '세속적 대표' 개념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에클레시아뿐 아니라 세속 사회인 '레지나(Regina)'의 유일하고 정당한 대표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1509년에 "represent"라는 동사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확실히 종교적으로 신비로운 관념을 함축하고 있었다(Pitkin 1967, 241-4).

이러한 종교적 맥락의 대표 개념은 '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인 하위 종교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성직자의 계층 구조를 통해서 확대되었고, 촘촘하게 조직되었다. 이렇게 '대표'의 개념은 교황을 넘어서, 일정한 단위를 통해 구성된 신자들의 단위를 개별 성직자들이 대표한다는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16세기 초의 유럽 봉건제에서는 종교적 단위들이 정치 및 사회 단위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일정한 종교적 단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단위의 종교적 대표자는 동시에 정치사회적으로 그 집단의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었다(Finer 1999, 1029-31; 이관후 2016b).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속에서 종교적 대표 개념이 점차 세속화되면서, 한 집단의 사람들을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보다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교황권으로부터 세속적 대표성을 쟁취했던 왕권은 대표의 신성성을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봉건 귀족들의 임의기구였던 '의회'들이 이

세속적 빈틈을 파고들어 대표 개념의 매개체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의회 기구가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했던 영국에서는, 17세기 초에 입법자들이 자신이 속한 정치 공동체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관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의 관계적 개념이 성립한 것이다(Pitkin 1967, 246-7).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표 개념은 종교적·신화적 차원에서 정치적·실천적 차원으로 변화해나갔다.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스키너는 르네상스 전후에 일어난 로마 정치사상의 부활과 중세 교부철학의 결합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여할 수 있으며,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대표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로마법적 관념이 중세적 종교 관념과 결합한 것이다(Skinner 2004).<sup>17)</sup> 이론적으로 본다면 근현대의 정치적 대표 개념은 이러한 주장을 과감하게 펼친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로부터 출발하여, 세속적 주권론을 확립한 장 보댕을 거쳐, 집단으로서의 인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주권체라는 이론적 전기를 마련한 홉스를 통해 형성되어 갔다.

피트킨은 근대의 대표(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명’되었다고 본다. 대표의 기원에 대한 피트킨의 해석은 현대 대표제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설명이지만, 동시에 대표(제)라는 정치 체계는 서구의 중세가 로마라는 고대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발명되었다는 ‘유럽 중심적’ 설명이기도 하다. 이는 근대의 정치적 ‘대표’ 개념이 다른 지역에서는 출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유럽 이외에서 대표제 정치체제와 대표제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은 유럽의 지적 세례와 제도적 이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설명은 이러한 ‘유럽기원설’에 대한 반박이면서 파생이기도 한 ‘미국기원설’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고든 우드(Gordon Wood)는 미국이 영국의 지배

---

17) 스키너의 관심은 ‘대표’보다는 교황권과 황제권(군주권)의 대립과, 르네상스의 세례를 받은 도시들의 ‘자유’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 모든 이야기는 ‘대표’와 또한 연결된다.

에서 독립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첨과 자치에 의한 ‘순수 민주주의 (pure democracy)’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대표제 민주주의’를 발명해낸 점이라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와 대표제의 결합이라는 근대 대표제 정치체제의 출현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건국과 제헌헌법이라는 것이다(Wood 2008, 69-71). 이것은 유럽에서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했던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실현되었다는 토크빌의 미국예외주의적 입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자유와 평등의 습속과 더불어 ‘대표제’라는 아이디어와 제도가 핵심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역사적 선후를 따져 본다면, 우드의 말대로 미국이 왕이 없는 대표제 정부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었을 때, 영국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원에 더해 극히 소수의 유권자가 뽑은 평민원이 결합된 중세적 의회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아직 혁명 전이었다. 그래서 우드는 중세적 계급에 따른 세습 지배계급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만 정부가 구성되는 ‘대표제 민주주의’ 체제가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체제가 곧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체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이관후 2016b).

이 주장은 확실히 미국 정치사상에 대한 유럽 대표제 전통의 영향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유럽의 영향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 잠재적 조건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체제인 대표제 민주주의는 기존의 대표제에 민주주의를 더하려는 유럽인들의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인류사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에 의해 발명된 독특한 체제다. 우드에 따르면, ‘앙시앙 레짐’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이라는 신세계가 없었다면, 민주주의라는 환상적 개념은 대표제와 만나지 못하고 고대 그리스의 전설로만 남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창조적 설계자들이 발명한 ‘대표제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선거권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과 세계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위의 두 주장 중에서 무엇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어느 편이든 대표제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먼저 발생한 개

넘이며, 다른 세계들이 그 영향권 하에서 그것의 원형을 닮아가는 중이라는 사실, 혹은 닮아가야 한다는 당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즉, 상동성의 원형을 탐구하고 있는 이 주장들은 CPT의 방법론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표제의 기원과 본질적 성격에 대해 대안적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모든 정치체제 혹은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표제이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거나, 다양한 다른 정치체제와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견해다.

역사가 사무엘 피너는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정부를 검토한 뒤, 이 정부들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대표제 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를 언급한다. 그는 이 정부 형태가 근대에 들어서 정교한 제도의 수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서구지만, 대표라는 관념은 어디에나 있었다고 본다(Finer 1999). 즉, 대표라는 개념, 대표제 정부라는 관념은, 그 단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시공간에서 존재했다는 것이다. 가령 ‘대표’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도 폴리스의 외교사절인 ‘대사(ambassador)’는 존재했다. 만약 대표라는 관념이 없다면,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한 아테네의 외교사절이 폴리스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의 합법성과 권위, 정당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데 피트킨은 동의한다(Pitkin 1967 2-3; 이관후 2016b).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유럽 이외의 곳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 개념을 종교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특히 누군가를 형식적으로 ‘대표(standing for)’하는 것에서 누군가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acting for)’으로 발전되었다고 이해한다면, 유가 정치사상은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에서부터 ‘대표’의 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대표의 정치적 정당성을 대표자의 자질에 대한 피대표자들의 동의, 수용, 평가와 만족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저항권의 포함 여부로까지 확장하더라도 유가 정치 이론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우선 공자의 군주유덕자론(君主有德者論)과 맹자의 유덕자군주론(有德者君主

論)은 대표자의 자질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 민심을 곧 천명으로 해석하는 맹자의 주장은 대표와 위임의 과정과 주체에 대한 해석이며, 민유방본(民惟邦本),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정치사상은 ‘대표-위임’ 관계의 목표와 조건을, 폭군 방벌론(暴君放伐論)은 그 관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종료되는지를 알려준다. 유가 사상에서 정치적 대표자는 백성의 의지와 이해를 하늘 앞에 대표하는 자이며,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은 실은 백성에게서 받는 것이다.

기원전 중국에서 시작된 유가의 ‘대표 이론’ 전통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2천 년이 지난 18세기 조선에서 다산 정약용은 이러한 대표제 정치의 개념을 ‘탕론(蕩論)’에서 흥미로운 비유로 재현해 내기도 했다.<sup>18)</sup>

대저 천자(天子)의 지위는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는 것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천자가 되었던 말인가, 아니면 땅에서 불쑥 솟아나 천자가 되었던 말인가. 근원을 따지면 이렇다. 5가(家)가 1린(隣)이 되고, 5가에서 장(長)으로 추대한 사람이 인장(隣長)이 된다. 5린(隣)이 1리(里)가 되고 5린의 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이장(里長)이 된다. 5비(鄙)가 1현(縣)이 되고 5비에서 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현장(縣長)이 된다. 또 여러 현장들이 추대한 사람이 제후(諸侯)가 되는 것이요, 제후들이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되는 것이고 보면 결국 천자란 것은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생겨난 것이다.

대저 여러 사람이 추대하여 생겨난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5가에 불협화음이 있다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을 바꿀 수 있고, 5린이 화합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을 바꿀 수 있고, 구후(九侯)와 팔백(八伯)이 화합을 못하면 구후와 팔백이 의논하여 천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구후와 팔백이 천

18) ‘탕론(蕩論)’은 폭군인 하나라의 걸(桀)왕을 제후였던 탕(湯)왕이 폐위하고 상나라를 세운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주제를 다룬 글이다.

자를 바꾸는 것은 5가가 인장을 바꾸고 25가가 이장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느 누가 신하가 임금을 쳤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정약용 1818?).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천자’, 곧 정당한 정치적 대표가 통치권을 갖게 되는 원리와 과정, 그리고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조건과 그에 대한 평가다. 특히 정치적 대표의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 맹자의 폭군방벌론이 전국시대의 극단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 ‘탕론’에서 정약용의 서술은 그 관념이 2천 년 뒤의 평화로운 조선에서도 유효하게 유지·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구에서 대표 개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한다(to act on behalf of some other(s))"는 의미를 획득했는데(Birch 1972, 15), 이러한 위임의 개념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제한 정부’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사회계약 이론의 맥락에서 보면, 정치적 위임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기로 동의하는 절차와 행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피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위임이 결정된다는 이 제한 정부 관념은, 유가 사상에서 ‘천자의 자리는 하늘이 주는 것이며, 하늘의 뜻은 곧 백성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 드러난다’는 주장과 교차한다. 또한 서구의 대표 개념이 상징적 대표에서 실질적 대표로, 곧 형식적 대표(standing for)에서 누군가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acting for)으로 발전했다면, ‘위민(爲民)’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 정치이론은 사회계약 이론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이러한 대표의 두 요소를 정당한 정부의 필요조건으로 결합시켰다.<sup>19)</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표 개념은 동서양의 여러 시공간에 존재한 보편적인

19)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통치자라도 피치자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힘이나 다른 권위만으로 자리를 보전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악행만을 일삼은 통치자라도 부재보다는 존재가 더 나은 이유가 있지 않으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의 개념적 발전은 오히려 동양이 빨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르면, 그러한 발생학적 우선성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 체계이며 CPT에서의 상호적 대화와 비교에서 요구되는 중립성을 갖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 정치에서 ‘대표(제)’는 민주주의를 정당성의 필수 요소로 수용했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대표(제)와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표제 민주주의, 곧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는, 원리적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많은 요소를 포기한 체제라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표제 민주주의는 고든 우드가 지적한 대로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며, 마넝이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요소는 실제로 반민주적이다.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귀족성과 탁월성이 보편성과 유사성을 압도한 체제인 것이다(Manin 1997). 그런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승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귀족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할 수도 있다(Sutherland 2018).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대표제라는 지배형태의 본질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근대 이후 정치적 대표(제)는,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선출 이후에는 그를 통제한다는 관념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대표제의 관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여러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선택된 민주주의의 형태는 대표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이었다. 이 체제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의회에 보낼 수 있으며, 정기적인 선거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한 투표권을 가질수록 더 민주적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질은 거의 대부분 대표를 뽑는 방식, 통제하는 방식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민주주의가 현대정치에서 유일한 게임의 룰이라면, 여전히 대표제는 그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제는 현대 정치체제의 핵심적 요소이자 다양한 시공간에서 유효한 개념이다. 최초의 정부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통치가 작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대표는 인간의 정치공동체와 함께 존재해왔다. ‘대표’는 개념적 중립성 안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포괄한다. 그래서 ‘대표’는 일반

적인 사회과학 영역과 비교정치의 핵심적인 기준이면서, 동시에 CPT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VI. 결론

이 글의 목적은 크게 3가지였다. 하나는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정인의 프로젝트를 CPT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그가 4가지 전략을 일정하게 완성하여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로 펴냈던 2004년부터 방법론적 고민을 계속하여 『남나들의 정치사상』을 펴냈던 2013년까지의 고민을 살펴보는 데 집중했다. 두 번째는, 그가 제시했던 생물학적 비유, 곧 상동성과 상사성의 비유가 과연 CPT 이론의 방법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전자가 ‘발생학적 동질성’이라면 후자는 ‘기능적 유사성’에 해당하며, 상사성에서 유래하는 기능적 유사성이 CPT에서 필요한 대화와 비교에서 유용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는, ‘개념적 중립성’을 갖춘 사례로서 ‘정당성’과 ‘대표’ 개념을 검토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당성과 대표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인민 주권, 정의, 행복,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개인성, 자연권 등의 개념들 역시, 그것의 발생학적 기원이 아닌 정치공동체에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두 또 다른 CPT연구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존 킨이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에서 취한 입장처럼(Keane 2017), 그 시공간을 그리스와 서구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역사로 확장한다면 개념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CPT 이론이 요구하는 개념적 중립성이 불가피하게 문화적 상대

---

20) 이 부분은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다.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성과 만난다는 점이다. 정당성 개념에서 잘 나타나듯이, CPT의 개념들 대부분은 인민의 의지가 그 정치적 가치와 체제에 대한 ‘신뢰’로 발현되는 연표 체계를 ‘익힘’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기반이 되는 신뢰 체계의 형성과 유지는 정치공동체 별로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서 나타나고, 그것은 실천이라는 ‘삶의 방식에 대한 체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Winch 1990). 이것은 통치의 메커니즘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주체들이 삶의 일부분으로 상시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마치가 이야기한 ‘맥락적 이해’ 없이는 특정 개념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여기서 문화적 상대성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호 비교와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와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공유되는 가치와 개념이 필수적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범주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 도덕, 인민의 복리 등 정치적 복종의 규범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든 정치공동체에 존재하겠지만, 한 사회의 도덕의 논리를 다른 사회의 종교의 논리에 들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관후 2015).

대표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피너의 주장처럼 모든 인간의 정부는 ‘대표’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되었지만, 그 정치적 대표가 가져야 하는 자질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에 따라 모두 다르고 또 항상 변화해 왔다. 문화 상대주의는 대표 개념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지 않으며,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특정한 대표(제)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적어도 한 정치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정당하게 통치되고 있다는 충분하고 좋은 이유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 대표(제)는 적절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사성에 기반을 둔 대표 개념을 통한 교차문화적 대화는, 선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상동성 발생론적 기원의 차이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횡단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은 탈서구중심주의의 이론화를 고민했던 강정인이 파악했던 달마이어의 방법론이 가진 의미와 한계, 그에 대한 다른 CPT 이론가들의 비판적 제언을 개

념적 중립성을 통해 재구성하고 그 사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며 강정인이 고민했던 한계를 충분히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강정인이 완성하지 못한 연구방법론이 의미 있는 작업이자 더 많은 주석을 필요로 하는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 강정인. 2013. 『넘나들의 정치사상』. 서울: 후마니타스.
- 강정인. 2016. “‘반서구중심적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신아세아』 23권 2호, 112-141.
- 이관후. 2015. “정당성은 빌려올 수 있는가.” 『정치사상연구』. 21권 1호, 89-114.
- 이관후. 2016a. “왜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용례의 기원과 함의.” 『한국정치연구』. 25권 2호, 1-26.
- 이관후. 2016b. “한국정치에서 대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 『시민과세계』28호. 1-34.
- 이상의·강정인. 2004. “동서양 정치사상에 있어서 政治的 正當性의 비교,” 『정치사상연구』 10권 1호. 83-110.
- 정약용. 1818?. ‘탕론(蕩論)’. 『여유당전서』.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 조경란. 2013.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서울: 글항아리.
- Barker, Rodney. 1990. *Political Legitimacy and th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etham, David. 1991. *The Legitimation of Power*. London: Palgrave Macmillan.
- Bellamy, Richard and Weale, Albert. 2015. “Political Legitimacy and European Monetary Union: Contracts, Constitutionalism and the Normative Logic of Two-Level Gam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2(2): 257-274.
- Birch, Anthony H. 1972. *Representation*. London: Macmillan.
- Bisztray, George. 1987. “The Controversy over Value Neutrality in Sociology and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24(1): 40-57.
- Coicaud, Jean-Marc. 2002. *Legitimacy and Politics*, trans. by David A. Curt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lmayr, Fred 2004. "Beyond Monologue: For a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 Perspectives on Politics*. 2(2): 249-257.
- de Barry, Wm. Theodore 1998. *Asian Values and Human Right: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de Bary, Wm. Theodore 1983. *The Liberal Tradition in China*.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 El Amine, Loubna. 2016. "Beyond East and West: Reorienting Political Theory through the Prism of Modernity." *Perspectives on Politics* 14(1): 102-120.
- Finer, Samuel E. 1999. *The History of Government from the Earliest Times Vol. 1: Ancient Monarchies and Empi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 Herbert L. A. 2012 [1961]. *The Concept of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enco, Leigh 2016. "Introduction: Thinking with the past: Political thought in and from the 'non-wes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15(4): 377-381.
- Jung, Haw Yol. 1999. "Postmodernity, Eurocentrism, and the Future of Political Philosophy." *Toward a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ed. Fred Dallmayr. Lanham: Lexington Books, 277-296.
- Kang, Jung-in 2017.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without borders: a journey across Ideological times and spaces*. Sogang University Press: Seoul.
- Keane, John. 양현수 역. 2017. 『민주주의 삶과 죽음』. 서울: 교양인.
- Manin, Bernard. 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 Andrew F. 2009. "What Is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The Review of Politics* 71: 531-565.
- Park, Chong-Min and Shin, Doh Chull 2006. "Do Asian Values Deter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46(3): 341-361.
- Peter, Fabienne. 2009. *Democratic Legitimacy*. London: Routledge.
- Pitkin, Hanna. F.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z, Joseph. 1990. "Introduction." *Authority*. ed. Raz Joseph.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19
- Rehfeld, Andrew. 2005. *The Concept of Constitu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ar, John. 1989. *Legitimacy in the Modern Stat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Simmon, John, A. 1999.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thics*, 109(4): 739-771.
- Skinner, Quentin. 박동천 역. 2004.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I』. 서울: 한길사.
- Sutherland, Keith. 2018. "The Triumph of Election: A Pyrrhic Victory." *Rivista di Storia delle Idee* 7: 135-152.
- Williams, Melissa S. and Warren, Mark E. 2014. "A Democratic Case for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Political Theory* 42(1): 26-57.
- Winch, Peter. 1990. *The Idea of a Social Science and its Relation to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Wood, Gordon S. 2008 [1968]. *Representation in the American Revolutio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투고일: 2022.10.16.	심사일: 2022.11.25.	게재확정일: 2022.11.25.
------------------	------------------	--------------------

# Analogy of ‘Analogous Organ’ of Kang Jung-In and ‘Conceptual Neutrality’ in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Lee, Kwanhu |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re-theorize the analogy of ‘analogy’ suggested by Kang Jung-in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to ‘conceptual neutrality’. Kang Jung-in has long sought alternatives to embody ‘transversality’ and ‘cross-cultural dialogue’ presented by Fred Dallmayr in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Kang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textual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concept of comparison and medi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 temporal domain as well as space in multicultural dialogue. For this, Kang suggested the analogy of ‘analogous organ’ of Biology that can be used in reverse and hybrid strategies among the four strategies of Post-Westerncentrism. This is methodology based on not ‘genetic homogeneity’ but ‘functional similarity’ as a medium for dialogue and comparison, and this article presented the concept of ‘legitimacy’ and ‘representation’ as an example of such conceptual neutrality.

---

**Key Words** | Post-Westerncentrism,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Cross-Cultural Dialogue, Transversality, Analogy, Conceptual neutrality